briefing
새사연 브리핑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재벌의 빵집 사업 철수보다 주목해야 할 경제권력 교체

2012.02.01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목차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

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케, 콤데가르송, 토리버치 같은 명품 브랜드 옷을 수입하고 있었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통해 조르조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들을 수입해 팔았다고 한다. 롯데가 장재영 사장은 비엔에프 통상을 통해 폴스미스, 캠퍼래들리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해왔단다. 문제가 되었던 유럽풍의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도 비슷한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공격하며 문제를 삼겠다고 밝혀 재벌가의 빵집 포기 이벤트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말 자체는 정확히 맞다.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유행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는 익사 직전”이라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은 아니다.

대통령의 취미생활 발언이 나오자 삼성을 필두로 현대, 엘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발 빠르게 빵집 포기 선언이 줄을 이었다. 특별한 저항도 없었다. 특히 삼성의 민첩한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에도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사업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즉시 삼성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지분매각 조치를 했다. 올 1월에는 세탁기, TV 등에 대해 엘지와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이를 "회사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담합행위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처했다. 그러더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베이커리 체인 ‘아티제’ 포기 발표까지 즉각 이어졌다.[1)]

1) 삼성의 발 빠른 대응은 ‘미래 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전략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이었던 구조조정본부의 새로운 이름이다. 한 마디로 재벌의 컨트롤 타워

이같은 재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보자'는 계산일 수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실적행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여당까지 나서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를 치루는 올해 1년이 정치적으로는 재벌의 시련기일 수 있으니 잠시 몸을 사리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표1] 재벌가 자녀의 제과 외식업 철수 결정 내역

그룹명 (재계 순위)	대표 및 지분소유자	계열사와 브랜드	철수여부
삼성 (1위)	장녀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보나비의 '아티제'	철수결정
현대차 (2위)	장녀 정성이(해비치호텔 고문)	편의사업부문 '오젠'	철수결정
엘지 (4위)	삼녀 구지은(아워홈 전무)	아워홈 청국장, 순대	철수결정
롯데 (5위)	장녀 신영자(롯데쇼핑 사장) 손녀 장선윤(블리스 사장)	시네마푸드블리스의 '포숑'	철수결정
신세계 (16위)	장녀 정유경(신세계 부회장)	조선호텔베이커리 '달로와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까지 번져나간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벌가에서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과연 내외적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맞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구상하는 재벌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미 금권과 언론, 관료 인맥까지 쥐고 있는 재벌 가문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환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 재벌에게 중요한 것은 3세 자녀들의 분할 상속과 분할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승계과정은 필연적으로 또 한 번의 경제력 집중

인 셈이다.

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가의 각 자녀들이 맡고 있는 계열 부분을 키워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차기 정권 임기 중에 3세 분할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사를 앞두고 빵집 같은 작은 문제로 인해 현재의 재벌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2] 빵집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다.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은 삼성과 현대차 등 유력 재벌 대기업 집단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워온 것에만 주목했고 그 성공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 자녀들이 빵집에 손댄 것이 관심을 받으면서 재벌의 국내 시장과 산업에 대한 장악력 역시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실 상인들의 경우 국내 유통재벌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이미 재벌의 시장 장악력이 가져오는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빵과 커피, 순대 이르기까지 서비스 산업 전 영역에 재벌이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재벌의 이 같은 문제는 한마디로 '경제력 집중'이라고 표현한다. 경제력 집중은 다시 ▶ 특정 제품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장 집중', ▶ 총수나 가족에게 재벌 그룹의 경제적 자원의 배치와 사용 권한이 집중되는 '소유 집중', 그리고 ▶ '일반 집중'으로 구분한다.[3] 일반집중은 "산업이나 제조업 일반에서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하게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다.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독과점처럼 시장 집중도나 재벌 일가에 의한 소유 집중도도 문제이지만 특히 일반 집중이 주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1월 27일 기사 "S Korea: bun fight with chaebol"이라는 기사에서 재벌들의 빵집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성장시키려 하면 재벌들이 계열사에 편입시켜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쨌든 빵집 포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3) 법률적인 관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요약한 글은 홍명수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2006, 경인문화사)를 참고하라.

최근의 한 논문은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경고하고 있다.

> "경제력 집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하나의 위협요소가 될 것은 틀림없다. 힘이 집중되면 그 힘이 남용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나고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이 나타난다."
> "특정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면 이 재벌은 자기사업 영역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제운용의 틀 자체를 자기 위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런 우려는 공연한 것이 아니다. 특정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일반집중이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된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거대기업 집단들, 미국의 트러스트, 독일의 콘체른, 일본의 계열(系列)이 모두 그러한 우려를 일으켰고 특히 독일과 일본의 기업집단은 파시즘의 경제적 기초라는 지목을 받았다. 결국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 스탠더드오일의 해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독일 콘체른과 일본 계열의 해체로 연결된 것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가져온 역사적 결말이었다.

한국의 재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한국 재벌은 5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의 율산그룹 파산과 구조조정이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재벌체제의 부분해체와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고, 환란에 의한 외부적 압박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의 절반 가까이가 해체되는 운명을 경험했다.

그런데 2012년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재벌 집단의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를 측정해보면 현재의 재벌 경제력 집중은 대체로 거의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5] 최근 연구들도 한결같이 "한국 기업집단의 경제

4) 최정표(2011), "재벌의 분할승계와 경제력 집중의 변화", 경영사학 제 26집 2호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반집중도는 기업집단이 아니라 개별기업들 상위 50대 기업, 100대 기업의 집중도라서 재벌의 집중도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재벌의 저량변수(Stock)로 자산을, 유량변수(Flow)로 매출액을 선택하여 국내총생산에 대비해 보는 것이다. 참고로 100대 기업 집중도 역시 2008년 들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

력 집중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감소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상승하여 2011년 현재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6] 물론 친 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 4년 기간 동안 경제력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모든 자료에서 확인된다.

재벌의 일반 집중도가 양적으로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는 재벌의 사업 영역이 빵과 순대를 거론할 정도로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거의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서비스 분야로 영위 업종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더 문제다. 이른바 업종 다각화가 확대된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개 재벌 기업집단의 "평균 영위업종 수가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1년 10.6개 업종에서 2011년 17.1개 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여 영위업종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집단의 다각화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7]

요약하면 **국내시장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진출을 동반하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이 주로는 재벌 2, 3세들로 경영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빵집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국내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비자등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의 갈등 소지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하나 덧붙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란이라는 외적 충격이 재벌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기제가 없다. 더욱이 1990년대까지와 달리 어떤 점에서는 정치권력의 통제마저 먹히지 않는 재벌권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경제력 집중도는 외환위기 수준을 뛰어넘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가능성은 재벌 3세 승계와 맞물리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바로 최근 재벌 개혁 논의의 뿌리이다.

---

6) 하준(2011), "기업집단의 다각화 추이 및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7) 하준(2011)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재벌가의 자녀들이 분할 상속을 통해 파생재벌 그룹들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더욱 커다란 재벌 가문을 만들어간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2세대 재벌 가족들의 분할 승계와 파생재벌 탄생의 역사를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최상위 재벌 그룹인 삼성과 현대, 엘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완전히 2세대 분할 승계가 완료되면서 다수의 파생재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파생재벌들 역시 업계의 상위로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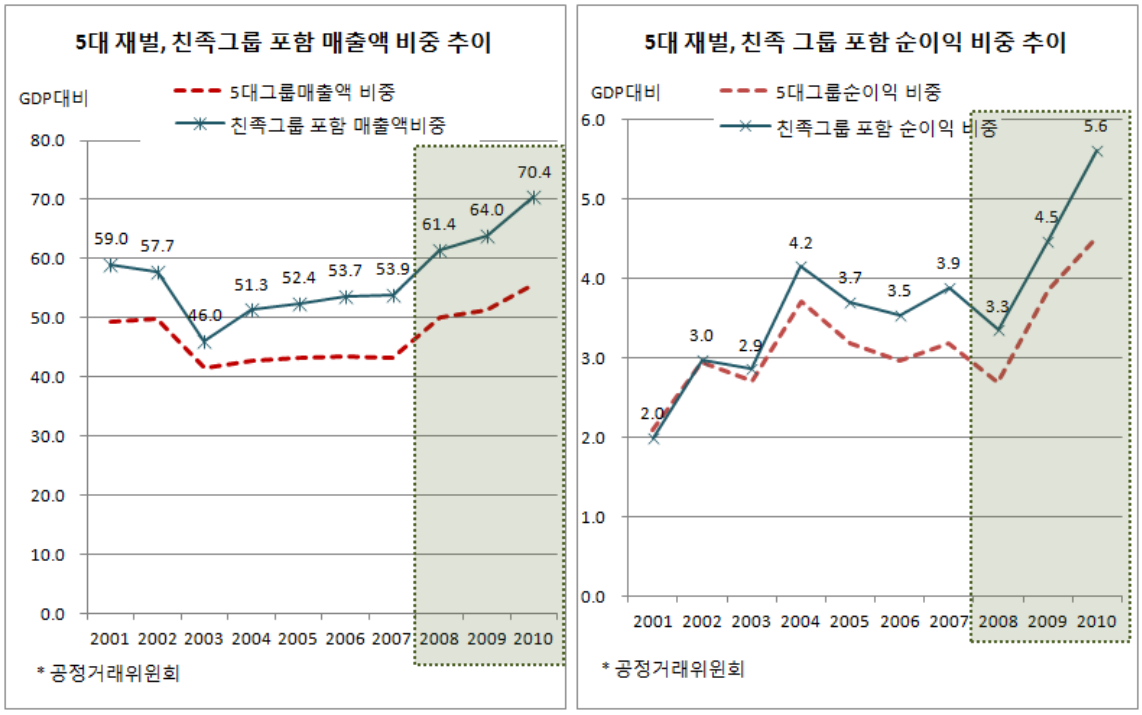
[표2] 재벌그룹 분할 승계와 파생 재벌의 탄생 요약

그룹명	핵심 재벌그룹 친족 계열분리 현황
삼성	한솔(1991), 새한(1995), 씨제이(1997), 신세계(1997), 보광(1997)
현대	한라(1977), 케이씨씨(1983), 성우(1990), 현대산업개발(1999), 현대백화점(1999), 현대해상화재(1999), 현대정유(2000), 현대차(2000), 현대중공업(2002)
엘지	희성(1996), 엘지화재(1999), 지에스(2003), 엘에스(2005)

그 결과 이들 재벌 분할된 재벌 가문까지 합쳐서 경제력 집중도를 계산해보면 훨씬 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은 씨제이(14위), 신세계(16위)까지 포함하여, 현대는 현대차, 현대(18위), 현대 중공업(6위), 현대 백화점(26위), 현대산업개발(33위)까지 포함하여, 엘지는 지에스(7위)와 엘에스(13위)를 포함하여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국내 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중이 55%에서 70%로 뛰어 오르고, 순이익 비중은 4.5% 수준에서 5.6%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결국 외환위기로 인해 재벌의 절반이 해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살아남은 거대 재벌들이 2세 분할 승계과정에서 친족들로 새로운 파생재벌을 만들어내면서 해체된 재벌의 빈자리를 메워갔다. 그리고 이들을 합칠 경우 경제력 집중도는 훨씬 증가한다.

[그림1] 5대 재벌 친족그룹 포함할 경우 경제력 집중도



[표3] 5대 재벌 친족그룹 포함할 경우 경제력 집중도 세부 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비중	49.5	49.8	41.4	42.8	43.3	43.6	43.1	50.0	51.3	55.7
친족그룹포함	59.0	57.7	46.0	51.3	52.4	53.7	53.9	61.4	64.0	70.4
순이익 비중	2.1	2.9	2.7	3.7	3.2	3.0	3.2	2.7	3.9	4.5
친족그룹포함	2.0	3.0	2.9	4.2	3.7	3.5	3.9	3.3	4.5	5.6

특히 “쟁점은 분할된 친족 재벌과 기존 모 재벌과의 관계다. 재벌간 경쟁구도에서 친족재벌을 완전히 독립된 재벌로 보지 않고 친족재벌과 모 재벌 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면 경제력 집중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8] 물론 이 문제는 최근 삼성이나 현대 사이에 M&A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이해관계

8) 최정표(2011)

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세대가 넘어갈수록 한국의 재계가 혈연적 유대와 연결로 깊어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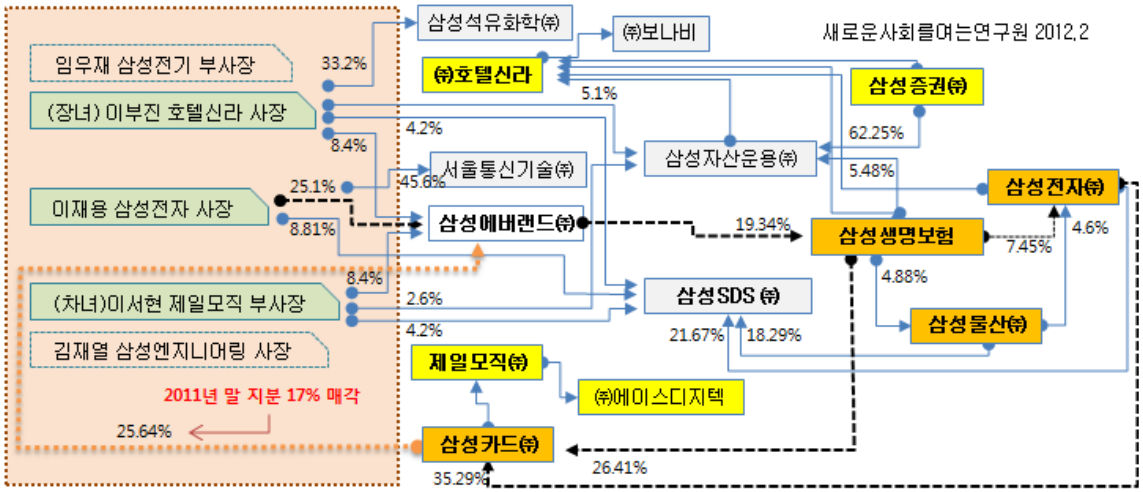
사실 국민들이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외식사업, 외국 명품 브랜드 수입 사업 등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취미생활로 서민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3세 자녀들로 재벌그룹의 소유와 경영 승계가 진행되면서 대다수 일반 청년들의 어려움과 다르게 이들은 무임승차에 가까운 세습과정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빵집이야 오늘 닫고 내일 더 크게 열면 그뿐이다.

재벌을 추적해왔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이미 2011년 3세 상속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재벌 3세 자녀들로의 분할 승계는 매우 가시적인 반경 안에 들어왔으며 차기 정권 안에 모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은 현재의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3세 재벌체제의 구조가 착근되려는 시점에서 재벌구조에 대한 규제의 틀과 질서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세워두는 것은 향후 10년 이상의 재벌체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선거용 정치구호로 내용도 없이 함부로 재벌개혁을 고창하다가 선거 끝나면 폐기해야 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현재 압도적인 1, 2위 재벌로 다른 그룹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의 분할승계는 매우 구체적으로 임박해있다.[9] 우선 삼성을 보자. 삼성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재용 사장과 두 딸로의 그룹 구획과 지분 승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그림2] 참조). 이재용 사장을 중심으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전자와 금융을 모두 포괄하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9) 삼성의 파생그룹인 신세계는 이미 2011년 5월에 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 그룹을,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신세계와 조선호텔을 공식적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림2] 삼성 3세 분할 승계를 앞둔 주요 지분 관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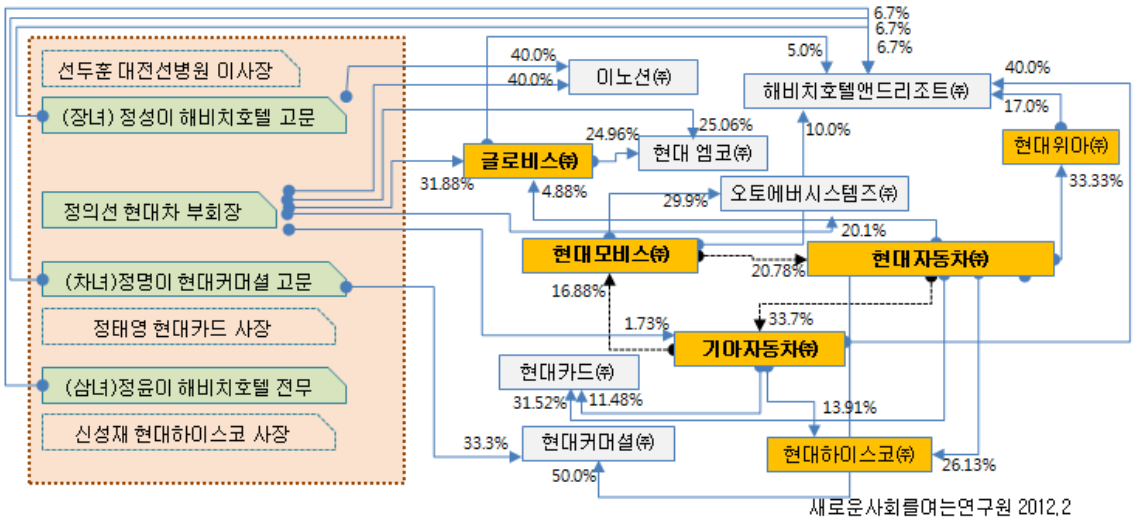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동시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중심으로 호텔, 레저, 바이오 등의 업종을 특화하고, 이서현 부사장은 광고와 패션 등을 중심으로 특화하여 파생재벌로 분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빵집은 문제도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순환출자 고리인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정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분할에 필요한 자금동원을 위해 모든 자녀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SDS를 상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진단이다. 그 과정에서 각 분할 그룹별로 또 한 번의 소유 집중과 일반 집중이 일어나면서 지배력 규모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소유권 분할 → 그룹 분할 → 각각의 소유권 재집중 → 각 주력그룹과 파생그룹의 경제력 재집중”의 경로를 밟을 것이다.

삼성보다는 속도가 한 발 늦지만 현대차도 곧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과 달리 압도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겸 기아차 사장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세 딸에게도 일정한 지분이 분할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다만 아직도 현대 모비스(6.96%), 현대자동차(5.17%), 글로비스(18.11%), 현대제철(12.52%), 현대하이스코(10.0%), 오토에버(10.0%) 등 대부분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 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와 정의선 부회장이 소유한 글로비스의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 삼성보다 느리게 승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림3] 현대차 3세 분할 승계를 앞둔 주요 지분관계 요약



* 2011년 기준

한편 현대 하이닉스 인수로 다시 몸집이 불어난 에스케이는 사촌 형제들 사이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도 엘지나 롯데 등에서도 크고 작은 친족들의 지배구조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2012년에는 선거에 의한 정치권력 교체 뿐 아니라 재계에서의 거대한 경제권력 교체도 준비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권력 교체는 선거를 치루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권력 교체는 더 많은 권력을 국민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경제 권력 교체는 더 많은 부와 경제력을 몇 몇 재벌 가문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문제를 다시 요약해보자. 빵집 철수로 불거진 재벌 자녀들의 문제는 공주들의 취미생활 같은 연예 한담이 아니다. 임박한 3세 분할 승계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핵심 부와 재산이 재배치되고 재집중되는 문제다. 줄잡아 수백 개 거대 기업들의 경영과 연관된 문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외환위기 직전수준까지 왔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내적 동력도 외적 충격도 없다. 재벌 시스템에 대한 규율을 미리 엄격하

게 세워서 재벌구조가 국민경제와 더 이상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규제 대신 자율을 선택했으나 완벽히 실패했다. 정치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의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말고 재벌을 규제의 울타리 속에 넣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법제화한다 하여도 제한이 많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을 규제하는 틀이다. 우리 연구원과 학계에서 재벌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체계, 바로 독일 콘체른 법과 유사한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재벌 규율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재벌 규모로 볼 때, 한 두 가지 규제책만으로 재벌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만으로 삼성그룹을 규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한 엘지나 에스케이를 순환출자 금지만으로 규제할 수 없다. 때문에 참여정부시절 재벌의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을 지낸 강철규 총장은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법 개정 등이 따로 이뤄져서는 재벌 개혁이 무력화된다"면서 "일종의 패키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10]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다. 강철규 총장이 적시한 출총제나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은 일종의 사전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조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과도하게 경제력 집중이 되어버렸고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분할 명령(청구)제와 계열분리 명령(청구)제도가 그것이다.[11]

두 제도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실제 기업분할 명령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도 백 년 동안 몇 번 사용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실제 "미국에서도 법원에 의하여 실제로 기업분할 명령이 내려진 경

10) 한겨레 2012.1.29
11) 우리나라에서 계열분리명령(청구)제도는 일반적으로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분리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재 재벌의 국내 서비스 업종 진출이 심각히 과도한 상황에서 굳이 금융계열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는 과거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몇 건에 불과하였지만 그 잠재적 규율효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계열분리나 기업분할은 기업세계의 필요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분할 상속과 분할 경영승계 시점에서는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문제는 그것이 대대적인 편법, 불법적 과정으로 국민경제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해 이를 국민경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엄격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시키자는 얘기다. 이는 사유재산권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매각을 지시할 뿐이다.